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정상 궤도

도·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협약 후속조치 점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하반기 전북사무소 개소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일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경진 대표,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 파인애플파트너스 김창호 대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소재 공공기관들과 추진한 '디지털 전환사업 및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협약이

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공기관 공동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카카오 클라우드를 참여하며 도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 거점을 위한 전북사무소를 마련하고 '전북 디지털혁신센터' 운영계획 수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들과 교육협력 강화, 교육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카카오 클라우드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여 IT 대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산업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디지털 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 인재들의 도내 안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직접 나선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도내에 지역 인재양성과 취업연계를 위한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센터는 디지털 인재양성, 스타트업·벤처 육성, 지역 디지털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구축·운영하는 디지털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포항시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IT 대기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토리서치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올 상반기에 자체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현황 및 환경을 조사하고 정보와 전략계획(ISP)을 실시했으며, 아토리서치 측에서는 도내의 클라우드 및 AI 관련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1단계 사업으로 8M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ata Center, AIDC)' 구축 추진을 위해 9월까지 PFV를 설립해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도내에 약 2,500명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우선 최대 5층으로 1단계 건축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초기대 AI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개발 수요 창출,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추가 수요 발굴을 통해 데이터센터 규모를 확충하는 2단계 이후 사업도 계획 중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대규모 인공지능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네트워크 구조, 냉각 시스템, 전용 랙 및 서버에 최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되는 가장 앞선 단계의 첨단 데이터센터로 도내 산학연 관계자들의 AI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고성능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양성이 유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장성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계 및 인프라 구축(MEP,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기계설비)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는 "본 센터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주요 AI 인프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등 참석자들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에 최선

부안 지진 발생 피해현장 건축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 부안에서 4.8 규모로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부안 지진발생 피해현장 조사를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26명(건축사 18, 기술사 8)과 공무원 32명(전북도 14, 군신5, 정읍5, 김제5, 남원3)으로 구성된 지진 피해현

장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했다. 전북자치도는 13일 위험도 평가단을 부안군에 긴급 지원하여 피해 건축물 231건(13일 06시 기준)에 대한 지진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도 평가는 △건축물의 심각한 손상에 관한 위험도 △위험물질 화재 등에 관한 위험도 △구조부재의 손상에 관한 위험도 △인접 건축물과 지반에 관한 위험도 △낙하 위험물에 관한

위험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한다. 1차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 '추가점검', '사용가능'으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표지부착(사용가능: 초록, 추가점검예정: 주황, 위험: 빨강)과 점검결과를 안내한다. '위험', '추가점검'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2단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진은 육지에서 60년 만에 규모 4.5 이상이 발생한 지진으로 주민 생활과 연결과 주택의 피해가 가장 많아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 농가 모집

전북자치도, 25일까지 시군 통해 접수

전북자치도가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희망 농업인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체결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상생 업무협약'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부여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공식력이 높다.

하반기 모집 규모는 농업인(개별 및 단체) 30건이며,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하고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농가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인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수수료 및 인증심사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7월부터 인증취득 컨설팅 및 심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은 12월에 인증서가 발급된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은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 및 환경보호 운동 등에 의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인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통해 농업 분야의 저탄소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29건, 786ha를 신청받아 추진 중이며, 8월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건설기계도 친환경으로 전환

전기굴착기 구매시 1대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현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노후 건설기계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총정원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를 공급받는 6톤 미만의 소형 굴착기와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20톤 이상의 중대형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규격 및 성능에 따라 배터리형은 최대 2,000만원, 케이블형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굴착기 40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굴착기는 매연이 없고 진동과 소음이 적어 실내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동일 규격의 디젤 굴착기와 비교해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해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작업조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완충 시 평균 8시간의 작업이 가능해 도심과 농촌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에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구매 전에 직접 방문해 제품 시연이 가능하고, 구매 후에도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기굴착기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접수 시기는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기종별 규격, 성능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무공해 건설기계인 전기굴착기 보급이 활성화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